

# 관계적 공간과 포용의 지리학

최병두\*

## Relational Space and Geography of Inclusion

Choi, Byung-Doo\*

**요약** : 이 논문은 포용의 지리학이 포용의 개념을 진정하게 포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기 위한 4가지 핵심 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포용의 개념에 내재된 공간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계적 공간에 관한 단순한 형태적 유형화에서 나아가 철학적 성찰을 통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둘째, 포용과 배제의 개념을 현실적 배경 속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포용과 배제를 동시에 작동하는 2개의 모멘텀으로 이해하고 그 구조적 메커니즘들을 고찰해야 한다. 셋째, 사회공간적 포용의 개념이 이데올로기로 동원되는 것을 가능한 차단하면서 진정한 규범적 개념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관련된 여러 윤리적 개념들, 예로 관용, 상호인정, 환대, 시민성 등의 개념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용성장이나 포용도시에 관한 지표개발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포용의 거버넌스 구축과 배제된 집단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을 지리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정책과 사회실천에 반영함으로써, 포용의 지리학은 지리학의 학술적 발전뿐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포용과 배제, 관계적 공간, 포용의 지리학, 포용도시, 포용성장, 포용의 윤리

**Abstract** : This paper is to discuss and argue for 4 key issues for geography of inclusion to be a new paradigm - to include authentically the concept of socio-spatial inclusion. First of all, a deeper philosophical reflection rather than mere formal typology of relational space is needed to see the spatial aspect inherent in the concept of inclusion. Secondly, it is highly important to see inclusion and exclusion as two momentums operating simultaneously, and to explore structural mechanisms through which those momentums are operated. Third, several ethical concepts such as tolerance, mutual recognition, hospitality, citizenship, etc. can be reappraised to conceptualize inclusion as a true normative term, while preventing the concept of inclusion from ideological mobilization by dominant powers. Finely, considering som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indicator approach to inclusive growth and inclusive city, and suggesting hegemonic governance of inclusion initiated by leadership of excluded and alienated groups in civil society, it is expected that geography of inclusion would be a new academic and policy paradigm which can contribute to both resolution of socio-spatial problems and to development of geography.

**Key Words** : inclusion and exclusion, relational space, geography of inclusion, inclusive city, inclusive growth, ethics for inclusion

---

이 논문은 2017년 지리학회지 기초강연으로 발표되었음.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 bdchoi@daegu.ac.kr

## 1. 서론: 포용의 지리학, 새로운 패러다임?

최근 ‘포용’을 수식어로 한 용어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포용도시, 포용성장, 포용적 지역 발전, 포용적 국토, 포용국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용례에서 포용은 기존의 도시·지역·국토의 개념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을 새로운 관점이나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용어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예로 박인권(2015)은 포용도시를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도시 비전”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한국의 도시 정책들을 평가·재해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포용도시는 도시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간)적 배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도시를 전망하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포용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하면,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개념은 현대 도시, 현대사회에서 만연한 사회공간적 배제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이며, 또한 동시에 이들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래 도시의 규범적 모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개념은 우리 도시,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화되는 배제의 문제가 기존의 도시 및 성장(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이 문제를 사회경제적 및 공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취약집단들(저소득층, 고령층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년층까지 포함)의 생활문제의 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변화된 계층들을 포용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포용성장’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공간적 측면에서 오늘날 도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차별적 접근과 서민주거의 불안정, 거주지 분리 및 젠트리피케이션, 무분별한 지역개발, 나아가 국토공간의 불균등 심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의 소외된 집단들의 포용과 도시 공간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포

용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포용/배제의 개념은 학술적이라기보다 사회적, 정책적 관심에서 출발했다. 이 용어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편부모 가정, 장애인, 노인, 약물중독자 등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시되었고, 1980~90년대에는 사회적 결속을 저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균열들을 다루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되었다. 예로, 1980년대 후반 유럽연합(EU)은 사회적 배제/포용을 유럽 통합을 위한 사회정책의 핵심 의제로 채택했으며, 1990년대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이를 사회경제적 정책과 각종 연구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Aalbers, 2009; 박인권, 2015).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지향하는 포용성장과 이를 도시 차원에 원용한 포용도시의 개념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포용성장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 2015), 유엔 하비타트(UN-HABITAT, 2015)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었고, 포용도시는 그 정책적 시사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시 차원에 반영한 규범적 개념으로 강조되게 되었다(문정호, 2017).

이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개념에 대한 관심은 사실 지난 30여 년 전 개도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적 또는 회의적 성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1980년대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시장경쟁 논리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지구적 규모로 확산됨에 따라, 한편으로 자본의 초과이윤 전유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흐름 등과 같이 하비(2007)가 지칭한 이른바 ‘탈취에 의한 축적’이 만연하는 반면, 노동계급의 비정규직화와 실업,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축소 등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포용에 대한 관심은 서구 선진국들에서 초래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포용성장의 개념은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초래한 1990년대 워싱턴합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성장모형으로 제시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은행, 유엔 하비타트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정책 아젠다로 명시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포용/배제의 개념은 서구 선진국들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확산되어, 한편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빈곤집단이나 사회적 소외집단들의 주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개념이 과연 우리 사회와 도시가 직면한 사회공간적 배제의 위기를 해소하고 포용적 미래를 전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용'이라는 단어는 일상적 규범으로 사용되는 진부한 용어를 마치 새로운 수식어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포용/배제의 개념이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할지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접근이나 분석 방법이 진부하다면 이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개념에 바탕을 둔 최근 연구들이나 정책보고서들은 포용이라는 용어를 적당히 규범적으로 정의하고, 우리 사회나 도시가 당면한 배제의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지표들을 개발하여 이에 따라 도시를 등급화하거나 도시 문제들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존에 다양한 수식어들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나 도시가 처해 있던 사회공간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소하고자 했던 학술적 또는 정책적 시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역대 정부들의 정책과 이를 정당화하거나 비판하고자 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예로 노무현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의 기능을 (일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더불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마을만들기 등이 핵심적 정책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명박정부로 넘어와서는 저탄소녹색성장과 녹색도시가 정책 기조로 설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창조경제와 창

조도시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기업이나 산업보다 인간의 창조성 또는 창조적 인재의 육성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문재인정부에 와서는 아직 국가발전정책 또는 도시정책이나 계획의 성격을 규정하는 특정한 용어나 개념 또는 정책기조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현 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은 분명 포용성장의 기조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 기조들이 제시되었고, 정부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의 연구자들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정당화(또는 비판)하는 개념이나 이론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 근거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책 기조를 이루는 핵심 개념들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와 관련된 현실 문제들을 접근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관련된 변수들과 세부 지표들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정책 기조들에 바탕을 둔 정책들의 시행은 대부분 심각한 문제들(예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실패)을 자초하거나 매우 편향된 방향(예로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무시한 창조경제 정책)으로 나아갔다. 물론 문재인정부는 아직 새로운 국가·도시발전정책의 기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술·규범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포용)성장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사회공간적 포용의 개념은 학술적·정책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포용의 개념, 특히 지리학의 입장에서 포용의 지리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의 개념에 내재한 공간적 측면을 보다 철학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용과 배제의 개념은 상호 대립적으로 분리된 현상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유발되는 현실적 배경 속에서 경제·정치적 메커니즘들이 작동하는 두 개의 모델

(momentum)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포용도시나 포용성장의 개념 등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포용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요구된다. 넷째,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실현을 위한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관행적인 접근방법(예로 지표개발 중심 연구와 이를 반영한 정책 추진)에서 나아가 실제 포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과 배제된 집단들의 주체적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포용의 지리학이 포용의 개념을 진정하게 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4가지 핵심 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포용의 개념에 내재된 공간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계적 공간의 개념을 성찰하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포용과 배제의 개념을 현실적 배경 속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포용과 배제의 동시성을 강조하면서, 그 구조적 메커니즘을 고찰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사회공간적 포용의 개념을 규범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윤리적 개념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포용성장이나 포용도시에 관한 지표개발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포용의 거버넌스 구축과 배제된 집단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을 지리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정책과 사회실천에 반영함으로써, 포용의 지리학은 지리학의 학문적 발전뿐 아니라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포용의 지리학은 2가지 측면, 즉 포용과 배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2개의 모멘텀으로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즉 포용과 배제의 변증법)과 포용의 윤리성은 항상 그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윤리와 이데올로기의 양면성)에서 불가피한 한계를 가진다.

## 2. 관계적 공간과 사물의 사회공간적 질서

포용의 개념을 지리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에 함의된 2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포용/배제는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다. 포용과 배제는 흔히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상태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경제적 자원(예로, 화폐)의 사용과 관련하여, 포용은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배제는 이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포용/배제의 개념은 단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유발시키는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는 구체적 사회적 자원이나 요소의 결핍 상태(예로 빈곤)라기보다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지만, “그러한 상태를 발생하는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태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인권, 2015, 110).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는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빈곤’의 개념과는 구분된다. 즉 빈곤의 사고는 개인이나 가계의 처분에서 자원의 부족을 문제시한다면, 사회적 배제는 불공정한 사회적 참여, 제한된 사회적 통합, 권력의 불균형 또는 결여 등 관계적 이슈에 먼저 관심을 둔다는 점이 강조된다(Room, 1995; 박인권, 2015).

다른 한 측면은 포용의 개념에 함의된 공간적 측면이다. 포용/배제의 개념에 함의된 공간적 측면은 포용도시의 개념 정의에서 우선 확인된다. 예로, 박인권(2015, 114)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도시는 물리적 조건에 의해 정의되는 지리적 실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기본단위이며,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의 범위와 중첩된 관계적 실체”라는 점이 강조되며, 이와 같이 “관계적으로 정의된 도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많은 모순적 사회 문제들이 몰집화되는 특별한 장소”로 규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도시는 역동적이며, 관계적이며, 또한 공간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포용도시의 변수 또는 지표의 설정에서 사회적 의존성 및 참여와 더불어 공간적 접근성이 3대 핵심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박인권, 2015). 또한 포용도시에 관한 하비타트 3차회의의 정책의제도 같은 맥락에서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참

여 확대와 사회적 혁신, 모든 사람이 양질의 기초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증진, 포용성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UN-HABITAT, 2015). 또한 세계은행도 포용성장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포용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면서(World Bank, 2009; 2015), 포용의 차원을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1).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은 공간적 측면에서 생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에의 균등한 접근성 향상이나 도시 빈민에 대한 기본서비스의 제공 및 공적 공간의 복원 등을 핵심 의제로 포함한다.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에 내포된 공간적 의미들은 흔히 특정한 규모의 공동체(예로 이웃사회, 도시, 국가 등)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로 카메론(Cameron, 2005)은 포용의 지리학을 개념화하면서, 흔히 사회적 배제는 주로 공동체나 이웃사회와 같이 ‘국지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사회적 포용은 특정한 공간적 차원이나 입지와 관련되지 않는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적 배제와 포용은 모두 특정한 지리적 또는 공간적 규모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포용도시의 개념은 분명 그 도시의 거주자들에게 소속감과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지리적 범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또한 단어의 의미로 보면, 배제/포용은 특정 사회공간적 집단이나 공동체의 영역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또한 참여한다(내포

된다)는 점에서 분명 규모적 또는 (엄격히 말해) 영역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영역적 측면에서 개념화된 배제/포용의 공간성은 이에 내재된 관계성과 결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배제는 특정한 사회공간적 영역으로부터 거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로부터 제외를 의미한다. 즉 배제와 포용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이들은 공간적 측면에서 영역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최근 관계적 공간(또는 지역)의 개념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계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학자들과 영역적 측면을 다시 강조하려는 학자들 간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Varr and Legendijk, 2013 등 참조). 관계적 공간의 개념은 지구적 이동성과 상호연계성의 증대 등 현실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구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망 또는 관계적 연계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공간적 편성들은 더 이상 장소에 고정되거나 영역적이지 아니하며, 다양한 순환적, 관계적 실체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점에서 영역적 관점에서 관계적 관점에서의 전환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MacLeod and Jones, 2007, 1179). 하지만, 관계적 관점에서 공간이나 지역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현실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지역적 차이나 특이성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왜 발생하거나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

표 1. 포용도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 차원     | 핵심과제                                    | 주요 세부내용  |
|--------|---|--|
| 공간적 포용 | 접근: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토지, 주거 및 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토지·주거</li> <li>- 도시빈민에 대한 기본 서비스</li> <li>- 도시계획과 관리</li> <li>- 공적 공간의 복원</li> <li>- 슬럼 개조 및 방지</li> <li>- 임대 보증</li> <li>- 토지 및 토지사용 조정</li> <li>- 토지사용 규제</li> <li>- 토지기반 금융</li> </ul> |
| 사회적 포용 | 권리와 참여: 개인과 집단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 및 폭력 방지</li> <li>- 권리 기반적 접근</li> <li>- 도시빈민 조직 지원</li> <li>- 공동체 주도적 발전</li> <li>- 참여 계획 및 거버넌스</li> </ul>  |
| 경제적 포용 | 기회: 모든 사람이 번영의 증대에 기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에 대한 공간적 접근 향상</li> <li>- 제도적 접근 향상</li> <li>- 기능 함양, 교육 접근</li> <li>- 친빈곤 경제 발전</li> <li>- 금융에의 접근</li> </ul>   |

자료: World Bank(2015, 13)

한 의문에 답하기 어렵게 된다(Jones, 2009).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 속에서도 개별 국가들은 상호 의존성이나 관계성을 증대시키고 다규모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영역에 기반을 둔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적 전환'은 아직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한 논쟁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쟁과 관련하여, 맥케인과 와드(McCann and Ward, 2010)는 지역 정책은 관계적이며 또한 동시에 영역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문제는 관계적 접근과 영역적 접근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의문으로 귀결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접근들 간의 구분과 논쟁은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쓸모없는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Jonas, 2012). 이러한 점에서 사회공간적 관계성에 관한 대안적 논의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즉 네트워크 또는 관계성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사회공간적 관계들의 다른 형태들, 예로 영역, 장소, 스케일 등을 무시하고, 공간을 한 차원으로만 이해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습(Jessop *et al.*, 2008)은 4가지 형태의 사회공간적 관계들(즉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이 제시한 4가지 형태의 사회공간적 관계들은 공간에 대한 영역적 사고와 관계적 사고를 결합 시킴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를 수직적 스케일 차원(국지적-지역적-국가적-지구적 스케일)뿐만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 차원(지구적 연계를 포함하는 지역 또는 장소들 간 관계 및 차이)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하겠다(박배균, 2012).

그러나 공간에 관한 영역적/관계적 관점에 관한 이러한 결합은 공간의 외형적(형태적) 접근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즉 이와 같은 결합은 관계적 공간(또는 영역적 공간)의 속성에 접근하기 위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오래 전 애그뉴(Agnew, 1999, 93)는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관련된 장소나 공간, 지역에 관한 많은 논의들에서 철학적 혼돈만 무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리학에서 공간에 관해 정말 깊이 있는 철학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계

적 공간의 개념화에서 외형적인 혼돈이 심층적인 사유를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간에 관한 논의 모두가 이러한 혼돈에 빠져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예로 매시(Massey, 1979)는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초기에 공간(장소와 지역)은 국지화된 사회적 관계 및 물질적 조건들과 거시적인 자본주의적 재구조화 과정 간 상호작용의 조합 또는 개인적 결과로 이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공간에 관한 매시의 주장은 보다 철학적인 사유를 반영하고 있다. 예로, 그녀는 “공간은 공존의 영역으로, 궤적의 다중성을 포괄하며, 이전에는 관련되지 않았던 주체와 객체, 사람과 사물들을 포함하며, 이들이 서로 접촉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Massey, 2005). 포용의 지리학을 위한 공간적 철학은 바로 이러한 공간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 즉 공존의 공간, 접촉과 관계의 공간을 개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포용/배제의 지리학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초의 지리학적 물음은 포용과 배제가 미분화된 상태였을 것이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등장하여 수렵과 채취를 위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낯선 주변을 둘러보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던 물음은 ‘여기는 어디인가?’라는 의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아온 삶의 체험을 통해 ‘여기가 어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사람들은 자신이 가보지 않았던 곳, ‘저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저기’는 새로운 지리학적 물음에 답하기 위한 대상, 즉 물음의 주체와는 분리된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서 공간(즉 절대적 공간)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스-로마시대의 지리학에서부터 근대의 지리학에 이르기까지 지리학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의 지리학으로 발달해 왔고, 실증주의적 지리학은 이러한 발달의 정점에 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지리학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절대적 공간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모색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신지역지리학은 ‘여기’와 ‘저기’를 관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통해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학적 물음의 변화는 공간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한다. 일정한 영토를 가진 고대 국가의 등장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침략과 식민지배에 바탕을 두었다. 공간은 더 이상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집단이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되었다. 국가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는 경계는 특정 영역에의 소속을 좌우하는 포용/배제의 구획선이 되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는 국가 주권의 지배력 하에서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되었고, 형식적인 포용(소속)과 배제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공간에서 원로나 상품의 지리적 이동은 점차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었지만, 공간 자체의 생산은 자본에 의해 지배되면서 점점 더 상품화·물신화되면서 일상생활로부터 소원하게 되었다. 오늘날 지구지방화 과정은 국경의 제도적 이완과 더불어 상품과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자유 이동을 촉진하며, 공간의 다규모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국민국가와 그 영토성에 근거를 둔 기존 방법론들의 오류가 지적되고 있으며, ‘장소의 공간’에서 ‘흐름의 공간’으로의 전환, 즉 관계적 전환과 더불어 네트워크, 스케일 등의 새로운 공간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실증주의적 지리학과 절대적 공간관에 대해 가장 앞서 비판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지리학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비이다. 그는 공간을 절대적 공간, 상대적 공간, 관계적 공간으로 구분한다(Harvey, 1973; Harvey, 2009). 절대적 공간은 사물과 분리된 공간 그 자체, 상대적 공간은 사물의 개체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 그리고 관계적 공간은 사물들이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이들 간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공간은 이렇게 유형화되어 분리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총체로서 존재하며, 공간을 어떤 관점에서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에 관한 인간의 실천에 좌우된다(Harvey, 1973, 13). 하비는 다양한 인간 실천 유형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3가지 공간 개념과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의 3차원적 유형화, 즉 물질적 공간(경험적 공간), 공간의 재현(개념화된 공간), 재현의 공간(체험의 공간)과 행렬적으로 연계시키고

자 한다. 하비의 이러한 공간 유형화는 절대적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의 공간관으로 사람들의 공간적 활동이나 사물들의 공간적 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는 공간을 사람과 사물의 사회공간적 활동을 이해하는 ‘인식의 틀’(또는 관점)로 이해할 따름이고, 관계적 공간 개념에 내재하는 심원한 철학적 함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sup>1)</sup>

관계적 공간 개념을 이와 같은 공간의 유형화에 따른 관점 또는 준거틀로 이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이 개념 자체 내에 함의된 보다 철학적인 의미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지리학뿐 아니라 사회이론 및 인문학에서 2가지 전환, 즉 관계적 전환과 공간적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분명 이들 간에 어떤 내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크랭과 스리프트(2013)은 ‘공간적 전환’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이론가와 철학자들을 논의하면서, 이들이 주목한 공간의 개념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 유클리드적 공간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사회적, 위상학적 공간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예로, 들뢰즈의 철학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특히 지리학적 철학이라는 점에서 ‘지철학’(geophilosophy)이라고 칭해진다.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공간화’ 없이 사유할 수 없으며, ‘사유하기’ 없이 공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도엘, 2013). 이러한 지철학적 사유는 예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저서, <천개의 고원>에서 빈번하게 출현한다. 예로 이들이 제시한 관계적 공간 메타포는 땅 속 줄기를 지칭하는 ‘리좀’의 개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리좀의 어떤 지점이건 다른 어떤 지점과도 연결 접속될 수 있고 또 연결 접속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의 점, 하나의 질서를 고정시키는 나무나 뿌리와는 전혀 다르다”(들뢰즈와 가타리, 2004, 12). 또한 이들이 제시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개념은 영역성의 개념과 관계성의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관계적 전환과 공간적 전환을 함께 부각시킨 사회이론으로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을 들 수 있다(최병두, 2015b). 이 이론의 주장자인 라투르에 의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비인간 사

물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맺어주는 네트워크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우리가 모든 관계를 네트워크로 정의할 때 겪는 어려움은 지리학의 보급 탓”이라고 비판한다. 즉 유클리드적 공간관에 기초한 “지리학적 개념은 단지 거리와 규모를 정의하는 격자에 대한 또 다른 연결일 뿐이다. [그러나 위상학적 관계적 공간관에 근거한] 네트워크 개념은 우리가 공간을 정의하는 데서 지리학자들의 횡포를 견어내는 것을 돕고, 우리에게 사회적이거나 ‘실제’의 공간이라는 관념이 아닌 관계라는 관념을 제공한다”(라투르, 2010, 102-103). 이러한 점에서 머독(Murdoch, 1998)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유클리드주의에 대한 전쟁 기계’라고 지칭하면서, 이 이론이 가지는 핵심적 유의성을 2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이 이론은 지리학적 연구에 흔히 나타나는 자연/사회, 행동/구조, 국지적/지구적인 것과 같은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적 사고를 제공한다. 둘째, 이 이론은 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유클리드적 공간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공간 개념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관계적 공간에 관한 철학적 사유나 이론적 개념화는 서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공간의식을 지배해 온 절대적, 비공간적(특히 시간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관계적이고 공간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또한 사물의 존재와 공간에 관한 서구적 의식과 동양적 사고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신영복(2004, 24)의 동양 철학적 강독에 의하면, 서구사회의 사회론은 원자론적 존재론에 따른 세계 인식을 전제하고 개별 존재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동양적 사고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관계망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동양의 이러한 관계론적 구성원리는 “배타적 독립성이나 개별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관계성을 존재의 본질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된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적 존재론과 이에 내재한 관계적 공간론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그 자체로서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물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실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공

간은 사물들이 그 실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관계를 통해 형성·변화한다.

관계적 공간에 관한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사물의 질서에 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서구 사회에서 관계적 공간에 기반한 사물의 질서에 관한 논의는 라이프니츠에서 화이트헤드로 이어진다.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공간은 사물과 시간과의 상호작용이나 또는 사물들 간의 상호작용 없이는 인지될 수 없으며, 사물들의 질서가 바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임진아, 2014, 185). 그러나 세계의 실체를 정신의 원자인 ‘모나드’로 파악하는 그의 모나드 개념은 이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과는 모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도 공간은 사물들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의미관련’적 개념이다. 임진아(2014, 179)의 해석에 의하면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의미관련은 물질과 (시)공간이 상호 독립적이고 무목적적인 주체-객체라는 이원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물질과 (시)공간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하비(Harvey, 2009)의 설명에 의하면, 화이트헤드는 “사고의 근본적 질서는 우선 관계를 가진 사물들의 세계이며, 그 다음으로 공간인데, 공간은 이 관계를 통해 그 근본적 실체가 규정되며 이 관계의 본질로부터 그 속성이 유도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관계적 공간 개념에 내재된 사물의 사회공간적 질서에 관한 사유는 철학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관한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들의 관계로서 질서 또는 혼란은 절대적(영역적) 공간뿐 아니라 관계적(위상적) 공간에서 표출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로, 방에 있는 책장에 꽂이지 않은 채 흩어져 있는 책들이나 도시에서 보행도로를 가로 막고 있는 자동차나 장애물들은 그 방이나 도시가 무질서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책들을 책장에 꽂는 것, 보행도로를 보행자들에 내어주는 것과 같이 사물들 간 관계성을 복원하는 것은 그 방이나 도시의 사회공간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사물들의 사회공간적 질서란 사물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들의 노래, ‘풍경’은 이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한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돌아오는] 풍경”

사물들 간의 관계성과 이에 따른 ‘제자리’는 사물들 자체에 고유하게 내재하거나 또는 선형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포용은 이러한 사회공간적 관계의 존재론에 바탕을 두고 철학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물들 간 관계성과 이에 따른 ‘제자리’는 특정 지배집단이나 사회구조적 조건(예로 자본주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규정된 관계성이나 ‘제자리’는 진정성(또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없다. 진정한 포용이란 단순히 타자에 대한 외형적 배려(또는 관용)가 아니라 상호인정을 통해 존재론적 안정감을 구축하고 나아가 사물들의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포용의 지리학에서 포용은 사물(사람 포함)들 간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포용의 공간은 임의적인 사회적 통합의 공간이라기보다 상호인정(투쟁)을 통한 조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사물들의 ‘제자리 풍경’이라는 메타포로 표현된다. 포용의 지리학은 사물의 공간적 질서 회복과 존재적 관계성의 복원을 지향해야 한다.

### 3. 현대 사회공간에서 배제와 포용의 역동성

현대 사회공간에서 배제와 포용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로, 사회적 배제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업과 비정규직의 확대,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부채와 빈곤에 의한 사회경제적 한계화 등이 흔히 거론되며, 정치·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배집단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배제, 정책적 의사결정과정 참여 거부 또는 기회 박탈,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의 부재,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성 제한, 사회적 소

속이나 교류로부터 배제, 문화적 측면에서 특정한 문화적 생활양식(예로 종교, 언어 등) 제한, 정체성에 대한 억압, 소외와 박탈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다 공간적 측면에서 이동성 제약, 거주지 분리, 젠트리피케이션(이른바 ‘등지 내몰림’) 등도 배제의 주요 양상들 가운데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공간적 포용은 이러한 배제의 양상들에 대립되는 것들로 파악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배제와 포용의 다양한 양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주요 지표들을 설정하고, 그 세부 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제로메타 등(Gerometta *et al.*, 2005)은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2가지 핵심적 차원으로 상호의존성과 참여를 제안했으며, 박인권(2015)은 여기에 공간적 포용을 더하여 3가지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공간적 배제와 포용의 양상들을 파악하고 개념화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포용을 이와 반대되는 배제에 대한 대립적 양상으로 파악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즉 카메론(Cameron, 200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포용은 단지 부정적으로만, 즉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포용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개념적으로 배제에 의해 지배된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포용이 경험적으로 측정되고 개념적으로 규정되는 대척점”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립적 개념으로 논의되고,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에서 배제의 다양한 양상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만 주로 고려된다. 카메론(Cameron, 2005; 2006)에 의하면, 이러한 단점은 사회적 포용에 관한 실질적이고 담론적인 지리학에 관한 비판적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유발된 것이라고 주장된다.

물론 포용과 배제의 개념을 역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로, 제로메타 등(Gerometta *et al.*, 2005, 2010)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사회적 관계와 노동관계에서 탈소속 또는 비통합” 및 “다양한 차원의 사회생활에서 참여의 부재”로 정의한다. 이 점을 역으로 이해하면,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관계와 노동관계에서 소속 또는 통합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 사회

생활에서 참여로 정의될 수 있고, 반대로 사회적 배제는 이러한 관계에서 탈소속 또는 비통합 및 참여의 부재와 같이 '부정적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포용을 2가지 측면 즉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과 참여로서의 포용을 제시하면서, 포용을 우선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배제를 정의하고 있다. 즉 이들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은 공식적인 노동분업 내 상호의존성과 공식적 협력, 그리고 사적 관계에서 호혜적 의무, 수용, 인정과 연대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반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는 이러한 관계들의 폐기 또는 와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포용을 배제에 앞서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 배제를 대립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뒤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포용을 배제의 개념과 (외형적으로)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실질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용을 배제와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이유는 포용에 관한 담론이 현실 사회에서 배제로 인한 사회공간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이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서 출발하였고, 이로 인해 포용의 개념이 배제에 대한 대안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점과 관련하여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기존에 사회적 문제들을 서술하던 다른 용어들에 비해 더 유의한가라는 의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예로, 사회적 배제/포용에 관한 논의들은 흔히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가 기존에 사용되던 '빈곤'의 개념에 비해 보다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사회적 배제는 어떤 구체적 사회적 요소의 결핍 상태(예로 빈곤)라기보다는 "사회의 여러 영역들에서 나타나는 균열과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인권, 2015, 110). 사실 서구 선진국들을 포함하여 일정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사회에서 빈곤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들의 특성을 완전히 묘사하기 어렵고, 따라서 배제/포용의 개념이 이러한 용어를 대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배제/포용의 개념은 빈곤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사람들의 삶에서 특정 (경제적) 측면에서 확인

되는 결핍 상태보다도 더 다양한 측면들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유럽의 정책 담론에서 우월성을 획득한 것처럼 보인다. 즉 사회(공간)적 배제는 단지 저소득과 이로 인한 자원이나 구매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나 부분적 참여, 주거 불안정이나 교육적 불이익, 주류문화와 다른 독특한 생활양식이나 정체성에 대한 억압 등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한다. 즉 사회적 배제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심은 예로 빈곤의 개념 못지않게 모호하며, 사회공간적 문제를 적실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빈곤하고 주변화된 개인이나 집단들의 체험된 경험에 주로 초점을 두는 한편, 탈복지주의적(postwelfarist) 세계에서 빈곤을 병리화하기 위한 용어로 설정하려 한다고 비난된다(Cameron, 2005).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는 빈곤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양상들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메커니즘(즉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와 기업주의적 도시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논의하지 않고 간과하기도 한다.

사회(공간)적 포용이 배제와 대립적으로 개념화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이들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포용이 그 자체적으로 개념화되기 어려운 것은 포용과 배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잭슨(Jackson, 1999)은 많은 문헌들에서 사회적 포용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규정하지만, 배제와 포용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한다. 예로,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며,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한 영역에서는 배제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포용될 수 있다. 또한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한계성은 배제 또는 제약의 근원이지만, 또한 동시에 포용이나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잭슨은 포용이 배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배제된 집단들이 그들 자신보다도 더 약한 집단들을 배제시킴으로써 포용을 상대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텐(Pradhan, 2006)도 이러한 점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배제된 타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포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로 전통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만, 상위 여성은 하위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이 상위집단에 소속되거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즉 사회적 포용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배제와 포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또 다른 여러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로, 동일한 사건이나 사업에서 배제와 포용의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가나 주택의 임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배제를 유발하지만,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 지역으로의 새로운 이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혜적이다. 또한 배제와 포용은 다규모적이라는 점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예로 도시의 개발은 포괄적으로 보면 도시인들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실제 개발이익은 이와 직접 관련된 집단들에게 배분되고, 그 외 도시 주민들은 이의 배분에서 배제된다. 또 다른 사례로, 댐이나 원전의 건설 및 운영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손실(즉 배제)을 입게 되지만, 정부가 이들에게 개인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많은 보상을 해준다면,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결국 비용의 전가에 따른 배제와 편익의 제공에 따른 포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제와 포용의 양면성은 훨씬 더 구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람들이 기업가에게 고용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 활동과 이에 따른 임금 획득을 보장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포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노동자는 일정한 화폐소득을 대가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고 노동시간을 기업가의 통제 하에 맡기게 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관리로부터 배제되게 된다.<sup>2)</sup>

이와 같이 포용과 배제가 대립적이면서도 양면적으로 개념화되는 궁극적 이유는 이들이 어떤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에 의해 추동되는 두 가지 모멘텀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용과 배제는 사회 구조적 메커니즘에 의해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변증법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포용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불균등발전에 주목할 수 있다. 근대화 또는 경제성장 과정은 기본적으로 배제와 포용의 모멘텀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즉 한 국가나 도시의 경제성장은 전체 구성원들에게 성장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실제 창출된 부의 분배과정은 불공정한 포용/배제를 초래한다.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이른바 '성장거점' 도시를 선별하여 집중 투자를 한다면, 그 도시는 근대적 경제발전과정에 포용되는 반면, 그 외 지역들은 배제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성장거점 도시에 대한 선별적 집중은 경제성장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과급되어 그 지역 주민들을 포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속적인 역류효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계속 배제하게 된다. 물론 선별적 집중투자의 결과는 과급효과와 역류효과의 중첩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어떤 통합적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는 결국 동시에 작동하는 포용과 배제의 모멘텀의 벡터 값에 의해 정해 질 것이다.

포용/배제의 모멘텀은 이와 같은 선별적 투자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의 결과를 과급/역류효과와 이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격차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구조적 측면에서 불균등발전을 설명하는 모순적 메커니즘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지역격차론에서 불균등발전론으로 관심의 전환은 단위지역들 간의 비교에서 지역들 간 구조적 관계성에 주목하도록 한다. 예로 닐 스미스(2017)에 의하면, 불균등발전은 자본주의 공간 생산에 내재된 차별화와 균등화의 대립적 또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차별화 경향은 자연적 차이에서 시작된 노동의 분업이 점차 사회화되면서 건조환경의 불균등한 집중과 집적으로 나타나며, 균등화 경향은 생산물 시장의 지구적 확장뿐만 아니라 노동의 조건이나 생산력 발전 수준의 평균화도 포함한다. 불균등발전은 이러한 차별화와 균등화 경향의 시소운동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은 불균등발전의 메커니즘에서 차별화(노동 분업, 생산설비와 건조환경, 자본의 집중 등) 경향은 배제의 모멘텀으로, 그리고 균등화(상품시장 및 노동 조건, 생산력의 발전 등) 경향은 포용의 모멘텀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발전(또는 자본축

적) 과정에 내재된 불균등발전은 이와 같이 차별화와 균등화의 시소운동 또는 포용과 배제의 모멘텀의 동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본축적 과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포용과 배제의 역동성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공간적 조정' 과정 속에서 더욱 심화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과잉축적의 위기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및 공간적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이로 인한 자본의 지리적 이동은 하비(2007)가 제시한 '공간적 조정'에 내재된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즉 자본은 한 지역에서 과잉축적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만, 이전한 새로운 지역에서 또 다시 과잉축적을 유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축적에 대한 공간적 장애와 지역적 차이는 파괴되어야 하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간적 조정은 극복되어야 할 새로운 공간적 장애와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공간적 조정은 새로운 공간 편성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 건조환경의 감가(또는 파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창조적 파괴'라고 지칭된다. 이와 같이 하비가 제시한 지역불균등발전에 관한 설명, 즉 자본축적에 내재된 역동적 과정으로서 공간적 조정과 창조적 파괴는 결국 감가의 피해를 지역적으로 차별화할 뿐 아니라 건조환경 구축의 파괴적/창조적 계기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포용과 배제의 모멘텀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은 다양한 세부 메커니즘들을 통해 포용과 배제의 모멘텀들을 만들어낸다. 예로 신용체제의 구축과 금융자본의 발달은 금융대출 및 금융시장(주식시장, 선물시장, 환시장 등도 포함)에 대한 접근의 차별성을 심화시킨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의 고도화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차별성(예로, 디지털 격차)을 확대시킨다. 무엇보다도 도시 재개발(또는 도시재생)과정에서 촉진되는 공적 공간의 사유화(즉 인클로저)는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있어 배제와 포용을 공간적으로 재편하게 된다. 김용창(2015)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

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사적 이익에 포섭된 도시공간이 공적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포용을 배제한다는 점은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공유자원에서 자연의 상품화 과정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현대 사회공간에서 포용과 배제의 역동성은 자본축적의 불균등 발전을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다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총량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자본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70년대 포드주의적 경제 위기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기존의 복지국가에서 수행해 온 복지 재정과 전달체계를 축소시키고 그 책임을 국가에서 시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자와 도시 서민들을 배제해 왔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부는 관련된 정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적 관리 전략으로 민영화, 공사파트너십, 지방서비스의 경쟁적 선별성 등을 채택했다(Brenner *et al.*, 2010; 최병두, 2015a).

이러한 정책 시행 방식은 흔히 '정부에서 거버넌스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강조되며, 특히 이러한 거버넌스에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개방·촉진하는 포용 전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 신자유주의 정부에서 장려된 거버넌스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공간적 문제들(특히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시민사회에 전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거버넌스에의 참여는 결국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즉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포용)를 통해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축소(즉 배제)를 유도하는 패러독스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포용과 배제의 역동적이고 역설적인 작동은 탈산업사회(도시)에서 과시적 소비문화와 의식의 파편화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로, 탈산업사회에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광고에 의해 촉진되는 소

비는 개인의 물질적 필요 충족에서 나아가 서로 차별화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적 소비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과시적 (명품) 소비를 통해 상류사회의 포용(심리)을 달성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배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소비상품에 대한 경쟁을 통해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의식의 파편화를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연대와 결속력을 해체시킨다. 결국 포용되기를 욕망하는 개별 소비자들의 과시적 소비는 사회적 배제를 전반적으로 확대시킨다. 다른 한편 자본(기업)의 전략 역시 배제와 포용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드보르(Debord)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업무시간이 끝나면, 노동자는 갑자기 생산의 조직과 감시의 모든 측면에서 그토록 노골적으로 가해지던 총체적 멸시[배제]로부터 벗어나 소비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공손하게 어른 취급[포용]을 받게 된다”(최병두, 2016a, 587에서 재인용). 배제와 포용의 모멘텀은 동일한 주체들(예로, 노동자-소비자) 간에도 시차를 두고 연이어 발생한다.

다른 한편, 포용과 배제를 구분하는 새로운 영역 또는 균열의 선들이 생성되고 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편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이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우선 이주과정에서 차별적 포용과 배제를 겪게 되며, 이주 후 정착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포용과 배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주노동자라고 할지라도 단순 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의 지위나 체류조건, 국적 취득 조건 등이 다르다. 동일한 외국인 이주자라고 할지라도 인종이나 국적 등에 따른 문화적 편견은 이들에 대한 포용/배제의 정도에 차이를 드러낸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인종적, 문화적 혼종화는 배제/포용에 따른 새로운 사회공간적 갈등/통합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인종적 차이뿐만 아니라 소득과 연령의 차이 그리고 젠더, 성, 장애 등에 따른 차이는 정체성의 억압과 차별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포용의 주요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 4. 사회공간적 관계의 윤리로서 포용

사회공간적 포용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에 반대되는 배제의 개념에 대립되게 개념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포용의 개념과 정책이 배제로 인한 사회공간적 문제의 해소 방안의 모색에서 출발했으며, 또한 포용과 배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전개되는 두 가지 모멘텀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공간적 포용이 그 자체로 개념화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념(이론)이나 정책들은 한편으로 현실 문제의 분석과 대책으로서 경험적 내용을 가지며, 다른 한편 미래 (이상) 사회의 전망을 위한 규범적 내용을 가진다. 포용의 개념 역시 이러한 경험적 기반과 규범적 전망을 동시에 내포한다. 사회공간적 포용을 경험적 현상들로 설명한다면, 명시적으로 이에 반대되는 배제의 개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공간적 포용을 윤리적 기반에서 규정할 경우, 포용의 개념화는 배제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단지 암묵적으로만 전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포용의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적, 특히 신자유주의적 발전과정에서 구조적 메커니즘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공간적 배제의 양상들을 누적·확대시켜 왔고, 이로 인한 갈등과 긴장, 아노미와 병리현상의 심화 등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용의 윤리는 사물의 사회공간적 관계성과 조화로운 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사물들이 제자리에서 존재론적 안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의 개념은 그 자체로서 윤리적 또는 규범적 성향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로, 변미리(2017, 26)에 의하면, “포용은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타인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외래어 톨레랑스(tolerance)와 같은 의미가 되지만, “포용도시에서 사용하는 포용성(inclusiveness)은 톨레랑스의 의미보다는 포괄성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은 폴레랑스를 한글로 번역한 ‘관용’의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거나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정호(2017)에 의하면, 포용도시의 개념에 내재된 규범적 의미는 2가지 철학적 이슈를 함의한다. 첫 번째 이슈는 사회정의로, “포용적 성장 개념 혹은 포용 개념은 사회철학으로서 자유주의(또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서 제시하는 사회정의의 철학적 입장을 함의한다.” 이러한 [사회정의에 관한] 자유주의의 관점은 “기회의 균등화를 포용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견인”하며, “기회의 균등화를 위해 사회 안에서의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그와 같은 사회정책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하도록 한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주장은 “롤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연장선상에서 ‘공동선’을 강조한 샌델(Sandel)의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해된다.

포용이 함의하는 두 번째 철학적 이슈는 ‘공간적 권리’ 또는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의 개념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거주자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권리, 도시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 등을 포함한다. 오늘날 이 개념은 “2016년 UN Habitat III의 의제로 검토될 만큼 넓은 의미로 계승·확산되고” 있으며, “포용도시에 대해 보다 주체적이고 진보적인 철학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주장된다. 박인권(2016) 역시 포용도시의 규범적 함의로 ‘정의로운 도시’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시한다.

이처럼 포용도시(그리고 포용성장)의 개념은 그 자체로 규범적 윤리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포용을 사회공간적 관계의 윤리적 개념으로 규정할 경우에도 2가지 측면은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포용의 윤리적 함의가 그 자체로 개념화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배제의 발생 배경에 대한 관심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배제/포용은 사회공간적 관계의 속성으로 파악되지만, 이를 조건지우는 것은 구조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배제를 유발하는 사회공간적 메커니즘을 전환시

키거나 제어하지 않고서는, 포용은 실현될 수 없으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의 윤리는 그 자체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배제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의 분석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즉 대안적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공간적 이론의 구축을 요구한다.

포용의 윤리학 정립에서 또 다른 고려사항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정교한 개념이나 논리라고 할지라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공간적 배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포용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은 분명 이러한 개념의 정책적, 정치적 동원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담론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포용의 개념이 진정하게 윤리적 개념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째 포용의 윤리에 관한 개념적 진정성과 둘째 이러한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진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절에서는 포용의 윤리에 관한 개념적 진정성을 검토하고, 다음 절에서 이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진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세계은행(World Bank, 2009; 2015)과 세계통화기금(IMF, 2015) 등도 소득불평등 등을 우려하면서 포용성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포용의 (윤리적) 담론에 관한 개념적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낸다.<sup>3)</sup> 문정호(2017)가 서술한 바와 같이, 이들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포용성장의 개념을 특히 부각시키게 된 것은 지난 30년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치체제가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차별화, 공공서비스 제공 부족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유발했고, 이러한 사회문제들이 다시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그와 같은 다양한 배제의 양상들로 고통 받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체제의 붕괴나 위기를 더 염려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세계은행의 우려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서술에 근거한다.

“급속하고 지속적인 빈곤 감소를 위하여, 사람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또한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성장이 요청된다. 급속한 성장 추세는 실질적인 빈곤 감소를 위하여 의심할 바 없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성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하여 부문들에 걸쳐 폭넓은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국가의 노동력의 대부분이 포용되어야 한다”(World Bank, 2009, 1).

이 인용문에서 세계은행은 이른바 ‘포용성장’의 개념을 빌려, 빈곤 감소를 위해 “급속한 성장 추세”가 필수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기반 구축과 국가 노동력의 포용”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은 이 인용문에 각주를 달면서, “폭넓게 기반한 포용적 성장을 장려하는 것은 정부지원의 산업정책으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고 투자를 위한 장으로 작동하는 표준을 창출하는 정책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 규제 완화와 글로벌 표준을 명시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이 포용(성장)의 개념을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동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개념을 사회공간적 통합이나 결속으로 이끌고자 하는 경향에서도 이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포용성장, 포용도시에 관한 논의에서, 사회통합이란 “구성원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박인권, 2015, 114). 물론 이러한 의미의 사회통합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전제로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은 상호 모순적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분명 긴장관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긴장은 오직 동태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변증법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공간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접근방법과 실천적 함의와 더불어 사회공간적 관계에 대한 규범적, 윤리적 개념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다면, 포용과 이에 근거한 ‘사회통합’의 담론은 쉽게 이데올로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 그 자체와 이를 반영한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개념은 규범적, 윤리적 함의를 가진다. 사회적 규범 또는 윤리는 흔히 인간의 이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윤리는 이성을 가지지 못한 동물들의 사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인간 사회에서 윤리에 관한 오랜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조화나 공생보다는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서구 철학 및 사회이론에서 근대성, 즉 계몽주의적 이성의 유의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쟁들이 지속되어 왔다. 이 논쟁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데카르트 이후 칸트를 거쳐 롤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성이 보편적 또는 원자적(개인주의적) 이성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훗설의 간주관성이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이성은 ‘관계적 이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에 반대하는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은 인간의 이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논쟁들에서 보면, 일단 포용의 윤리학이 기본적으로 인간 이성이 보편적·선형적으로 주어지기보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물론 사회적 관계에 관한 윤리적 개념들도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sup>4)</sup>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포용성장이나 포용도시의 규범적 함의와 관련하여 우선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논의되고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매우 복잡한 논리적 준거들에 근거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초적 입장’에 있는 계약당사자들이 사회적 기본가치로서 정의에 관한 2가지 원칙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즉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신의 재능이나 지위,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에서 각 개인들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지만(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경우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점(제2원칙, 차등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이러한 롤스의 정의론을 포용의 개념화에 원용하면, 사회적 소수자들(소득이나 자산뿐 아니라 인종이나 장애, 젠더와 성 등에 의해 차별화된 취약집단들)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이나 불이익은 불공정하며,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예로, 적합한 보상이나 수혜)을 통해 포용해야 하며, 이들을

포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오늘날 사회적 부의 정의로운 재분배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롤스의 정의론은 현실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보편적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에 근거한다. 이로 인해 그의 이론에서 ‘무지의 베일’ 이면에 있는 원초적 개인들은 현실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무연고적 자아’이고, 또한 사회공간적 권력관계를 무시한 ‘우연적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적 정의론자들은 현실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반영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윤리적 개념으로 ‘관용’을 제시한다. 관용이란 넓은 의미로 타자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며,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과 다르더라도 타자의 권리를 용인하거나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된다. 이러한 관용은 약자에 대한 관대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주의를 포기하고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타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변미리(2017)가 지적한 것처럼, 포용은 ‘타인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점에서 관용의 철학적 논의에 근거하여 개념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용의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회적 권력의 불균형을 벗어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에서 판단하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까지도 관용(포용)하는 것은 결국 타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이어지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 또는 약화시키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논쟁적 관계에 있는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의 불간섭 원칙으로는 소수집단의 권리 보장과 나아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공동체의 전통이나 문화, 구성원으로서 가치와 덕목, 사회적 권리와 책무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테일러(Taylor)나 호네스(Honneth)에 의해 제시된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적 관용 담론은 개인의 보편적 정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 간 상호관심과 이에 바탕을 둔 포용

이나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에 부적절하고, 대신 개인의 정체성이 타자로부터 동등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과정, 즉 상호 인정(recognition)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상호인정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 간에 실천적으로 진행되는 인정투쟁 과정에 의해 획득된다는 점에서 ‘인정의 정치’를 중시한다(최병두, 2017). 이를 통해 형성되는 인정의 공간은 상생과 공존의 공간으로서 매시가 제시한 ‘관계적 공간’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상호인정은 포용적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공적 속의’(deliberation)의 전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페인스타인(Fainstein, 2014)의 ‘정의로운 도시’의 개념과 이를 위한 3가지 원칙(속의민주주의, 다양성, 형평성)이 포용도시의 규범으로 인용되기도 한다(Murie *et al.*, 2011; 박인권, 2015; 변미리, 2017). 그러나 이러한 상호인정의 개념은 흔히 억압된 문화나 정체성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지만, 물질적 부의 재분배에서 배제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포용의 윤리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또 다른 윤리적 개념으로 ‘환대’(hospitality)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환대의 개념은 그리스-로마시대에 이미 논의가 시작되어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거쳐 오늘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세계시민주의’의 근거를 이룬다. 세계시민주의는 한 지방이나 국가에 대한 한정적 소속감이나 인종적 편견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의 시민으로 포괄하는 세계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환대란 다른 집단이나 지역에 속하는 이방인 또는 타자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피해를 입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다른 집단이나 지역에 참여할 또는 방문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대의 권리를 허용함에 있어, 칸트는 이방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지만, 테리다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환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최병두, 2012; 2017). 환대의 공간은 인정의 공간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자아와 타자, 주체와 객체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서, 사회공간적 포용의 윤리를 위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

은 이러한 환대의 공간을 누가 만들 것인가, 무조건 환대의 실현이 가능한가 등의 의문을 남긴다. 또한 이러한 세계시민주의는 흔히 오늘날 세계도시에서 사회공간적 갈등을 완화(또는 은폐)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나 공동체주의적 정의론 또는 세계시민주의에 근거한 환대이론 등은 사회공간적 관계의 윤리로서 주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이들을 철학적 사유에서 다시 사회(공간)적 이론으로 전환하여 보다 현실적 의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성’(citizenship)에 주목할 수 있다. 시민성이란 좁은 의미로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을 규정하는 일단의 권리와 의무(책임)와 관련되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측면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조철기, 2016). 이러한 점에서 시민성의 개념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부의 재분배과정이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이나 문화를 영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함의한다. 따라서 포용의 윤리에서 시민성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왜 또는 어떻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되지 아니하고 참여할 권리(그리고 의무)를 가지는가에 관한 논의를 위한 준거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논의들은 현대 사회의 사회공간적 변화와 지구지방화 과정을 반영하여 시민성이 약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확장되어, 지구지방적으로 다규모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오늘날 시민성은 보편적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권리로서 지구적(보편적) 시민성, 일정 장소에 생활하는 주민으로서 가지는 사회(복지)적 권리로서 지방적(장소-특정적) 시민성, 그리고 이러한 지구적, 지방적 시민성을 제도화한 국가적(제도적) 시민성들이 다규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박인권(2015)은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이 스케일(국가/광역, 도시/지역, 근린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시민성에 기반한 포용의 윤리는 사회공간적으로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들이 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정당화시켜주지만, 실제 왜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못한다. 또한 이

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필수적으로 공간적 측면을 함의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성에 관한 새로운 개념화, 특히 공간적 권리로서 포용에 대한 권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Purcell, 2003).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권리로서 포용에 관한 규범적 측면의 주요 요소가 된다. 르페브르(Lefebvre)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 개념은 최근 하비와 그 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이 개념은 도시인들이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권리, 도시정치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 등을 내포한다(강현수, 2010; 문정호, 2017). 하비(2014, 54)는 이 개념이 “내재적이고 초월적이지 않은 여러 가능성으로 채워져야 하는 텅 빈 기표”라고 지적하지만, 이러한 도시적 권리가 정당화되는 것은 도시인들이 도시(도시의 잉여나 건조환경)를 공동으로 생산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배분과 재투자를 통한 도시공간의 재편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당연히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중심적 시민권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이를 재규문화(또는 재영역화)한 도시에 관한 권리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개념은 2016년 UN Habitat III(2015)의 의제에 반영되어,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는 포용도시에 대해 보다 주체적이고 진보적인 철학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서술되게 되었다.

## 5. 결론: 포용을 위한 정책과 실천 전략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개념은 그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지향적 기업주의 정부(중앙 및 지방) 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사회적 배제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회공간적 포용 전략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 또는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포용의 지리학은 새로운 학술적, 정책적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포용

의 개념 또는 패러다임일지라도, 앞선 다른 다양한 규범적 개념들이나 정책기조들(예로 녹색도시, 창조도시 등)들처럼 외형적으로는 규범적 담론을 확산시키면서도 실제로 기존의 지배적 사회공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첫째,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개념에 내재된 ‘관계적 공간’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단순히 공간의 형태적 유형화에서 나아가 보다 심층적인 철학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회공간적 포용을 배제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대립적인 것들로 개념화하기보다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의 2가지 모멘텀으로 설정하고, 포용/배제의 양상들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배경의 여러 측면들을 분석해 보았다. 셋째, 포용/배제의 개념은 분명 지배집단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에 함의된 윤리적 개념들을 진정하게 성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들의 연장선상에서 끝으로 포용의 지리학은 정책적으로 원용되고 실천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떠한 윤리적 개념이나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바탕을 둔 현실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손쉬운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포용성장, 포용도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험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현실 문제들을 평가한 다음, 이들의 해소 방안들을 강구해 보는 것이다. 예로, 제로메타 등(Gerometta et al., 2005)은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2가지 핵심적 차원으로 상호의존성과 참여를 제시했다. 상호의존성은 “형식적인 노동 분업 내의 상호의존성과 형식적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의 호혜적 의무, 수용, 인정, 그리고 연대” 등을 포함하며, 참여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물질적 소비, 교육, 사회문화, 그리고 정서 등의 모든 사회영역에서 부여되는 각종 기회에 개입하여 들어갈 수 있는 권능과 실질적 능력을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특히 참여는 물질적 참여(소비능력을 갖는 것을 필요), 정치적 제도적 참여(권능의 부여), 문화적 참여(문화적 자본과 교육의 기회 필요), 나아가 모

든 과정에서 거부나 소외와 같은 배제적 느낌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Gerometta et al., 2005; 박인권, 2015, 111).

박인권(2015)은 포용도시의 지표 설정에서 이러한 두 차원이 “사회”라는 일반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도시의 비전을 설정함에서는 공간적 차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간적 포용을 또 다른 핵심 차원으로 설정한다. 그에 의하면 공간적 포용은 “포용도시의 가장 기본적 조건으로서 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살만한 주거 공간’(decent housing)을 도시 내에서 갖는 것을 의미” 하며, 이러한 공간적 포용이 이뤄져야 하는 지리적 범위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앞서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세계은행(World Bank, 2015)도 최근 포용도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위하여 사회적 포용, 경제적 포용에 더하여 공간적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공간적 포용의 핵심과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토지, 주거 및 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으로 설정하고,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 적절한 토지와 주거와 이를 위한 토지 및 토지사용 조정과 규제, 토지기반 금융 등과 더불어 도시민민에 대한 기본서비스와 임대 보증, 슬럼 개조 및 방지,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리 및 이를 통한 공적 공간의 복원 등이 제시된다.

이와 같이 포용성장이나 포용도시의 개념을 경험적으로 적용·확인하기 위하여 공간적 차원을 포함한 구체적 지표들의 설정과 이를 통한 성장전략이나 도시정책의 모색은 한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포용도시의 구체적 지표들은 어떤 도시나 사회가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표들을 우선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접근은 중요한 한계를 가진다. 포용/배제는 사회나 도시의 어떤 정태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를 발생시키는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동태적이고 관계적” 개념이라는 점이 거듭 주장된다(박인권, 2015).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포용/배제는 어떤 정태적이고 비관계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로는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다. 뿐만 아

나라 이러한 지표 분석으로는 포용/배제의 상태를 발생시키는 과정에 접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사실 포용/배제의 개념은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들과 세부내용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분류하여 핵심과제와 세부내용을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자의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점들에서 사회공간적 포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의 모색은 다른 규범적 개념 및 정책 기조들, 예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창조경제와 창조도시 등보다도 더 어려운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후자의 정책 기조들은 탄소저감 또는 창조적 인재 육성이라는 한정되고 보다 명시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사회공간적 포용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 또는 구체적 의제가 없는 정책 기조이기 때문이다. 물론 저탄소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의 정책 기조 역시 규범적이고 포괄적이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표들도 상당히 모호하거나 실제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로 플로리다(2008)가 창조성 지수로 설정한 3가지 변수들, 즉 관용, 인재,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둘러싸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관용은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으로 이해되지만, 실제 이러한 의미를 반영한 변수로 한 도시에서 게이나 외국인의 수로 표현되기도 했다. 물론 이들에 대한 관용 또는 환영은 중요하지만,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에서 나아가 상호 인정을 통한 공존의 문화와 호혜적 경제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최병두, 2016b).<sup>6)</sup>

사회공간적 포용을 위한 실천 전략들은 이와 같은 지표 설정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이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과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구조 전환을 위하여 우리 사회나 도시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이 요청되고 있다. 제로메타 등(Gerometta, et al., 2005)은 거버넌스 관계

의 재구축을 강조하면서,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에 의하면, 시민사회의 역할은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특정한 조건 하에서 좀 더 통합적인 도시와 이를 촉진하는 거버넌스 편제를 향한 가치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특정한 조건이란 공적 속의와 사회경제적 선도성(initiative)을 선호하는 대규모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들은 기존에 성공적인 프로젝트처럼 보였던 지구적 신자유주의 레짐이 사회공간적 배제의 심화로 한계에 봉착하여 위기로 내몰린 상황에서, 사회적 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와 정책으로의 전환, 즉 '새로운 복지 레짐'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문제는 포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사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은 이미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제시되었고, 그 규범적 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으로 비난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제소(Jessop, 2002)는 신공동체주의를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신공동체주의는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으로 시민사회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 시민들 간을 상호 매개할 수 있도록 공동체-지향적 장소를 창출하는 것이다(Gerometta et al., 2005). 이러한 제소의 신공동체주의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공동체-지향적 장소 창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거버넌스 체제와는 다소 다르다고 할지라도<sup>7)</sup>, 이를 통해 국가, 시장, 시민들이 어떻게 매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모호하다. 이러한 점에서 로빈(Robin, 2015)은 장소-기반적 혁신을 통해 포용 도시를 선도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에서 국지적 공동체의 포용을 향상시키는 시민 주도적인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이와 같이 사회공간적 포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엔 하비타트(UN Habitat, 2015)도 이러한 점에서 포용도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적 계획과 참여적 의사결

정을 핵심적 전략으로 채택하고, 최종 산출보다는 민주적 도시 거버넌스의 구축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어떻게 포용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떤 딜레마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들은 포용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들이 장소-기반적인 시민사회에 바탕을 두고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시민사회의 취약한 집단들이 스스로 자신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우선 서로 인정하고 연대하여 헤게모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에서 공적 속의를 통해 자신들의 전망과 실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시의 소외된 집단들이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바대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 1) 하비(Harvey, 2009)는 이러한 공간의 유형화와 관련하여, “절대적, 상대적 또는 관계적 준거틀의 선택을 위한 정당성을 간단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3가지 개념들이 상호변증법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간 상호작용에 바탕을 두고 항상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 그 외에도 또 다른 유형의 포용과 배제의 양면성은 아감벤(Agamben)이 제시한 “예외상태” 또는 ‘예외공간’의 개념 또는 전략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Cameron, 2006). 예외 공간이란 법에 의해 법의 시행이 유보된 공간(예로 감옥, 수용소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외공간의 개념을 일반화하면 산업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역외자본을 포용하기 위하여 일정 구역을 국가의 나머지 영토로부터 배제(법적 규제로부터 면제)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3) 또한 OECD(2012; 2015)도 포용성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 있다.
- 4) 제4절의 후반부는 최병두(2017)의 논문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 참조.

- 5) 포용도시에 관한 지표설정과 이를 통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에 관한 논의로, 박인권 외(2017), 황선아 외(2016) 등 참조.
- 6) 이러한 점에서 정운찬(2016)은 “창의적 인재는 특정한 장소에 축적된 자산이 아니라 언제라도 다른 공간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유동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둘 수 있는 공간적 능력이 바로 사회적 관용이며, 이것이 도시에서 축적하는 저장(stock)자산”이라고 주장한다(정운찬, 2016).
- 7) Cameron(2015)에 의하면, 1990년 후반 사회적 배제에 관한 학술 논쟁이 있었으며, 당시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의에 의해 주도되었던 사회적 배제 논쟁의 초기 단계에는 국지적 주민들의 역량을 재강화하려는 새로운 투자계획이 제안되었고,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 토지 재분배와 같은 급진적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한다.

## 참고문헌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김용창, 2015,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1): 이론적 검토,” 대한지리학회지, 50(4), 431-449.
- 도엘(최병두 역), 2013, 지리학에서 글렁크 없애기: 닥터 수스와 질 들뢰즈 이후의 공간과학, 크랭 & 스프리트 편, 공간적 사유, 에코 리브로, 201-232(Doel, M.A., 2000, Un-glunking geography: spatial Science after Dr. *Seuss and Gilles Deleuze*, in Crang, M. and Thrift, N.(eds), Thinking Space, Routledge, London, 117-135).
- 들뢰즈·기타리(김재인 역), 2004, 천개의 고원, 새물결 (Deleuze, G. and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Les Editions de Minuit, Paris).
- 라투르(홍성욱 역), 2010,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관하여: 약간의 해명, 그리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홍성욱 편, 인간·사물·동맹, 이음, 95-124 (Latour, B., 1997, *On actor-network theory: a few clarifications plus more than a few complications*, <http://www.cours.fse.ulaval.ca/edd-65804/latour-clarifications.pdf>).
- 문정호, 2017, “포용도시 등장 배경과 의미, 도시문제,” 582, 22-25.

- 박배균, 2012,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1), 37-59.
-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25(1), 95-139.
- 박인권, 2016, “도시에 대한 권리와 포용도시: 한국의 ‘신도시의제’ 설정을 위하여,” *대한지리학회 2016년 지리학대회 발표논문 요약집*.
- 박인권·이민주·홍철·임인선, 2017, “한국 도시의 포용성 진단과 유형별 특성 분석,” *도시행정학보*, 30(3), 111-130.
- 변미리, 2017, “포용도시 연구동향과 특징,” *도시문제*, 582,
- 스미스, 닐(최병두 외 역), 2017, 불균등발전, 한울(Smith, N., 2008(3rd edn), *Uneven Development*, Univ. of Georgia Press, Athens and London).
- 신영복, 2004,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돌베개.
- 임진아, 2014, “화이트헤드의 관계적 공간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 *화이트헤드연구*, 28, 155-193.
- 정운찬, 2016, “인간의 도시, 같이 크는 사회 - 혁신과 포용의 길,” *부산발전포럼*, 161, 64-75.
- 조철기, 2016,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 등장 - 국가 시민성에서 문화적 시민성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714-729.
- 최병두, 2012, “이방인의 권리와 환대의 윤리: 칸트와 데리다 사상의 지리학적 함의,” *문화역사지리*, 24(3), 16-36.
- 최병두, 2015a, “협력적 거버넌스와 영남권 지역발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3), 427-449.
- 최병두, 2015b,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 사회*, 53, 126-173.
- 최병두, 2016a, “도시적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576-598.
- 최병두, 2016b, *창조경제와 창조도시: 이론과 정책, 비판과 대안*, 열린길(대구대학교 출판부).
- 최병두, 2017, “다문화사회의 윤리적 개념들과 공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3), 694-715.
- 크랭·스리프트 편(최병두 역), 2013,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로* (Crang, M. and Thrift, N. (eds), *Thinking Space*, Routledge, London).
- 플로리다, 리차드(이원호·이종호·서민철 역), 2008,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Florida, R.,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London).
- 하비, 데이비드(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한울* (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 Press).
- 하비, 데이비드(한상연 역), 2014, *반란의 도시, 에이도스*(Harvey, D.,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 황선아·김종구·손지현, 2016, “포용도시를 위한 사회적, 물리적 지표의 구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6(4), 735-745.
- Aalbers, M. B., 2009, Social exclusion, in R. Hutchison (ed.), *Encyclopedia of Urban Studies*. Sage Publications, 731-735.
- Agnew, J, 1999, Regions on the mind does not equal regions of the min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3, 91-96.
- Brenner, N., Peck, J., Theodore, N., 2010, After neoliberalization?, *Globalizations*, 7(3), 327-345.
- Cameron, A., 2005, Geographies of welfare and exclusion: initial repor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 194-203.
- Cameron, A., 2006, Geographies of welfare and exclusion: social inclusion and excep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3), 396-404.
- Fainstein, 2014, The just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18(1), 1-18.
- Gerometta, J. Haussermann, H. & Longo, G. 2005, Social innovation and civil society in urban governance strategies for inclusive city, *Urban Studies*, 42(11), 2007-2021.
-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Edward Arnold, London (최병두 역, 1982,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 Harvey, D., 2009, *Cosmopolitanism and the Geographies of Freedom*, Columbia Univ. New York (최병두 역, *근간, 세계시민주의와 자유와 해방의 지리학*, 삼천리).
- IMF. 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 Jackson, C., 1999, Social exclusion and gender: Does one size fit all?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11(1), 125-146

- Jessop, B., 2002,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urban governance: a state-theoretical perspective, *Antipode*, 34(2), pp. 452-472.
- Jessop, B., Brenner, N.,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 389-401.
- Jonas, A., 2012, Region and place: regionalism in ques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6, 263-272.
- Jones, M., 2009, Phase space: geography, relational thinking and beyon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3, 487-506.
- MacLeod G and Jones M., 2007, Territorial, scalar, networked, connected: In what sense a 'regional world'? *Regional Studies* 41(9): 1177-1192.
- Massey, D., 1979, In What sense a regional problem? *Regional Studies*, 12(2), 233-243.
- Massey, D., 2005, *For Space*, Sage, London.
- McCann, E. and Ward, K., 2010, Relationality/territoriality: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cities in the world, *Geoforum*, 41, 175-184.
- Murdoch, J., 1998, The spaces of actor-network theory. *Geoforum*, 29(4): 357-374.
- Murie A., and Musterd S., 2004, Social exclusion and opportunity structures in European cities and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41(8), 1441-1459.
- OECD. 2012. *Promoting inclusive growth: Challenges and policies*. Paris: OECD.
- OECD. 2015.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Paris: OECD.
- Purcell, M., 2003,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the global city: reimagining the capitalist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3), 564-591.
- Pradhan, R., 2006,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and social inclusion in Nepalese Context: some preliminary remarks, *The Organisation*, 9(3), i-xi.
- Rawal, N., 2008,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a review, *Dhaulagiri Journal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2, 161-180.
- Robin, H., 2015. *Leading the Inclusive City: Place-Based Innovation for a Bounded Planet*. Bristol, UK: Policy Press.
- Room. G. 1995,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e new European agenda for policy and research, in G. Room (ed.).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Policy Press, Bristol, 1-9.
- UN-Habitat. 2015. *Inclusive Cities*. Habitat III Issue Papers.
- Varró, K. and Lagendijk, A., 2013, Conceptualizing the region: in what sense relational? *Regional Studies*, 47(1), 18-28.
- World Bank. 2009. What is Inclusive Growth? World Bank, Washington DC.
- World Bank. 2015. *Inclusive Cities Approach* Paper. GSURR.
- 교신: 최병두,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구대학교 사범대 지리교육과(이메일: bdchoi@daegu.ac.kr, 전화: 053-850-4155, 팩스: 053-850-4151)  
Correspondence: Byung-Doo Choi,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15 Naeri-ri, Jillryang-up, Gyeongsan-si, Gyeongbuk, 712-714, Korea (e-mail: bdchoi@daegu.ac.kr, phone: +82-53-850-4155, fax: +82-053-850-4151)

최초투고일 2017. 12. 4  
수정일 2017. 12. 26  
최종접수일 2017. 12. 29